

“전날 늦게까지 음주 후 운전대 잡지 마세요”

광주 북구 용봉동 숙취운전 단속 현장 가보니

광주 전체 6건 적발...6월부터 주기적 단속 효과 경찰, 늦은 음주 후 다음날 대중교통 이용 당부

“현재 음주 단속 중입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고가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 광주 5개 경찰서가 출근길 합동 숙취 단속을 나섰다.

30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1 C 인근.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은 숙취 단속을 위해 이른 시간부터 동분서주했다.

이날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은 총 18명(기동대 13명, 북부경찰서 교통과 5명). 이들은 3차선 중 2차선에 갈라선(안전고깔)을 각각 4개씩 설치해 단속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어 무전기와 비접촉 음주 감지기, 접촉 음주 감지기를 소지하고 음주 단속 팻말을 도로 위에 펼쳐 놓은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단속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사용

했다. 비접촉 음주 감지기는 버튼을 누르고 차 안 공기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차량 공기 흡입과 운전자 입김 측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만약 알코올이 측정됐을 경우 빨간 불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접촉 음주 감지기를 사용해 보다 정확한 측정을 진행한다.

이들은 경광봉을 이용해 먼저 차량을 정지시킨 뒤 “음주 측정 중입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차량 내부로 음주 감지기를 흔들었다. 이후 감지되지 않은 차량에는 “이동하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하며 단속을 이어갔다.

단속이 시작된 지 10분이 지난 오전 6시50분께 한 대형 SUV 차량에서 첫 알코올 반응이 나타났다. 해당 차량을 단속하던 경찰관은 무전기를 통해 알코올이 감지됐다는 신호를 보냈다. 운전자는 전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경찰의 안내에 따라 갖가에 차를 세운 뒤 대



30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용봉동 한 도로에서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김다인기자

기 중이던 승합차량에 들어가 추가 측정을 실시했다.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는 창밖으로 여러 번 입을 행귀했다. 현장의 경찰관은 “가글을 했을 경우 또는 위셔액을 뿌렸

을 때 감지기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측정 결과 해당 운전자의 음주 수치는 0.014로, 정지 수치(0.03)에 미치지 못했

다. 운전자는 훈방 조치를 받은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서는 반응이 있었지만, 입김으로 측정했을 때는 적발되지 않은 사례는 4건이었다.

이날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숙취 단속에서는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3개월간 주기적으로 실시한 숙취 단속이 효과를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광주 5개 경찰서 합동으로 시행된 ‘숙취 단속’에서는 정지 처분 5명, 취소 처분 1명 등 총 6명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6월3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1천196건(취소 756건, 정지 440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으며 122건(취소 39건, 정지 83건)의 숙취운전을 적발했다.

특히 6월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한 숙취 운전 단속 결과 6월 57건, 7월 45건, 8월 20건으로 이달 기준 전날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드는 등 눈에 띄는 효과를 보였다.

광주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소량의 음주를 했어도 늦게까지 마셨다면 숙취 단속에 걸릴 위험이 크다. 만약 숙취 운전 중에 사고가 날 때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전날 늦게까지 과음했다면 다음 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드린다”고 말했다. /김다인기자

전남 현직 단체장 5명 공선법 위반 조사 중

강진·장흥군수 검찰 송치...보성·영광·담양군수도 수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 현직 기초단체장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30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 대접을 하고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다.

강 군수 측은 A씨가 임의로 한 행동이며 본인은 관여한 행동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흥경찰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김성정장군수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청은 김철우 보성군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역 주민이 수십명의 관리당원 명단을 관리하며 금품을 살포하고 공무원들이 경선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사건과 관련해 김 군수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영광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강종만 영광

군수를 조사 중이다.

광주경찰청도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에게 조의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청은 앞서 관리당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조사했으나 관련 녹취록 발인 당사자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고 다른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6개월) 내에 기소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대법,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됐다. /연합뉴스

소나무 선물 받은 전 무안 부군수 검찰 송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농지법 위반 의혹도

농막을 가장한 전원주택을 지었다는 의혹으로 대기 발령 조치됐던 A 전 무안 부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무안경찰서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A 전 무안 부군수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전 부군수는 지난해 11월 농막을 가장한 전원주택을 지을 당시 지인으로 부터 시가 260만 상당의 소나무 등 나무 6그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1일자로 무안 부군수로 발령난 그는 같은 해 11월 부인 명의로 무안읍의 밭 400평(1천322㎡)을 매입한 뒤 2층 주택을 건립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기도 했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상 논밭에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과 휴식을 위해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인 ‘농막’만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A 전 부군수는 기단석을 견고하게 쌓고 그 위로 가로 7m 폭 3m, 높이 4m 2층 구조의 건물을 지었다. 실내에는 에어컨을 비롯해 비가림시설,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 각종 편의 시설 등을 갖췄다. 또한 건물 앞 마당에는 잔

디와 돌 징검다리를 놓고, 아름드리 소나무를 심었다.

논란이 일자 전남도는 지난 7월 특별 감사를 벌여 농지법 위반 여부와 기증 받은 소나무가 청탁금지법 저촉되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A 전 부군수를 전남도청 총무과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무안=김성호기자

“간병 대신 현금” 공무원 폭행 실행

간병 대신 현금 지원을 요구하며 공무원 폭행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후 4시40분께 곡성군청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여성 공무원의 얼굴을 양산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에게 맞고 쓰러지면서 종아리뼈가 골절돼 최소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오복기자

주택건설사업업무소홀공무원 징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개별 건축허가로 처리하고 견폐율과 용적률의 허용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건축을 허가한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매월동 단독주택단지 도시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4명이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감사원 감사로 해당 주택단지는 ‘단독주택단지’가 아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이지만 개별 건축허가를 내렸고, 견폐율과 용적률이 허용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 허가를 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허가해준 사업은 매월동 일원 1만8천447㎡에 단독주택 32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단지 부지와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면서 단독주택 11호에 대한 건축 허가를 새로 신청했다.

주택법 등에 따르면 단독주택 3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1만㎡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매월동 신축사업도 이에 해당하지만, 이들 공무원은 개별 건축허가로 처리했다. /안재영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